

“반도체·車·IT 산업 지원, 리스크 대응… 90일간 협상 총력”

정부, 주요산업 보호·경쟁력 확보
美, 중국에 125% 고율 관세 부과
대중국·제3국 수출 타격 불가피

반도체, 수출 애로해소 긴급 대응
車, 미국 시장서 경쟁력 유지 목표
IT, 기술 혁신·협력 강화 방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석달 가량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다만, 미국이 125%의 고율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와 공급망 연결고리가 깊은 대중국 수출과 제3국 수출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부과 발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국내 업계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밝

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꼽히는 규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는) 우리나라 관세 수준, 세제, 세금 수준, 비관세 장벽 등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협의를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에 따라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9일(미국 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특과원들과 만나 “금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만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나 제3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8일~9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관

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케슬러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간 통화(8일)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며 “금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진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품목별 관세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 수요 위축도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에 긴급대응하는 한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코트라 ‘관세 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도 상황, 송전망 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관세전쟁 등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을 위한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한편, 첨단산업 기술혁신용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은, 경기불황 속 금리인하 고심… 가계부채 증가 등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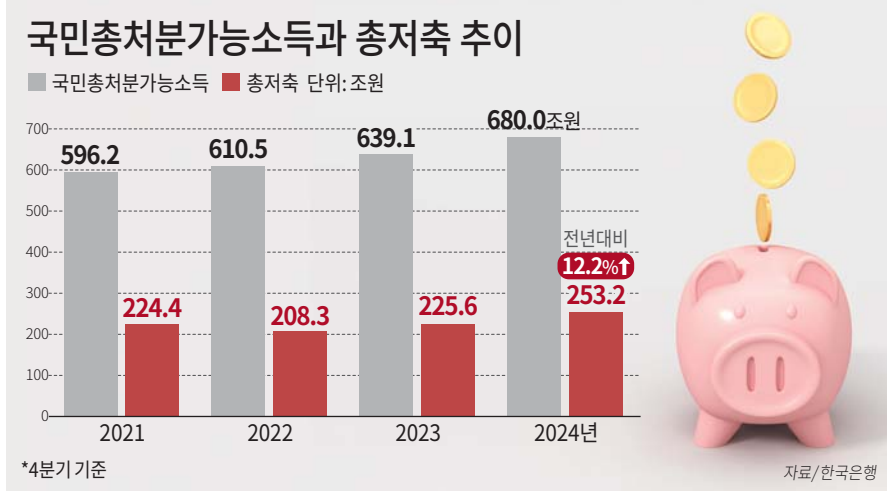
17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개최
가계부채 2248조 GDP비 비율 92.1%

“경기불황은 한 국가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을 수 있다. 현금을 모으는 일에만 사람들의 신경이 집중되면서 실제 재화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근본적인 강점, 약점과 별개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경기불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 많은 쿠폰(현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1480원대를 웃도는 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낮아진 금리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계부채가 쏠릴 가능성도 높아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저축의 역설 경기불황

1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저축액은 253조2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5조6785억 원)과 비교해 12.2% 증가했다. 2023년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7.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말 기준 680조631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 국민들이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美 관세정책에… 韓 성장률 0%대 전망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17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등 유동성이 많아지면 소비 심리가 완화돼 내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둔화될 수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로 부과하고, 그 외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을 두고 90일간 10%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94%는 수출이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철강 자동차 부문이 절반 이상이다. 이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복 관세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면 수출 부진이 악화돼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관세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JP모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CE) 등 주요 해외투자은행(IB)은 각각 0.7%, 0.9%로 0%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ING는 “추경 지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관세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하방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인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5월 금통위 회의날짜(5월 29일)가 조기대선 사전투표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4월·7월·10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480원대 환율, 금리인하 ‘쉽지 않아’

한은은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리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2248조 20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다. 금리를 낮춰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빛

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도 적잖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리해 온 가계부채가 되레 증가할 수 있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도 문제다. 서울 외국환중개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482.90원에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관세정책을 유예하면서 1450원대로 낮아졌지만, 관세정책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원화까지는 더 하락해 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연고점까지 간 상황에서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4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동결만장일치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115@